

“타운홀 미팅 정치적 악용은 광주·전남 발전 역행 행위”

지방선거 과열 조짐…대통령·단체장간 대화 비하 메시지 난무
대통령실 ‘이 대통령 마케팅’ 우려…“당과 대응 방안 논의할 것”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 (6월30일자 광주일보 4면)에 대해 대통령실이 적극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진행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호남을 비하하는 사례를 주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도가 지나친 ‘이 대통령 마케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조기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 물밑 경쟁도 뜨거워지면서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후보군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이재명과 의기투합!”, “이재명의 오랜 동지”, “2010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과 000은 지방 자치와 분권 모델을 만들었다”는 등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살포해 앞서 대통령실이 관련 정보 취합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각종 선거 과정에 대통령 관련 직함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 당과 적극 협력했다”면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수석은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광주·전남을 비하하는 행위를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실 수석 회의에서 일부 수석들은 “‘12·3 비상계엄’과 정권 교체 과정에 광주·전남의 희생과 역할이 컸는데 마치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은 광주·전남의 해묵은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해당 지자체장을 한 자리에 모

아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답변을 내놓은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강조했고,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대통령실 내 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이 대통령이 예산·정책 건의 사안을 경청하며 대선 과정에 호남 역사별을 엮어줬다는 ‘호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행보로서 의미도 컸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산단 조성, 규제완화, 재생에너지를 활용가능한 송배선망 구축, AI 모빌리티 신도시(에이모시티) 조성 계획을 밝혔고, 전남 동부권 미래 첨단 산단 조성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 행사 자체를 현역 단체장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미래 전략이 없는 곳’이라는 ‘호남 비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자치 단체장간 대화의 진의를 왜곡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남에 발전전략이 없다는 비하성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모처럼 맞은 광주·전남 발전의 계기에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지역균형 발전 원칙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며, 가장 차별을 받았던 지역이 그 혜택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힘난한 계엄·탄핵정국을 풀고 어렵사리 새 정권을 탄생시킨 시점에서 선부분 여론조사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다”면서 1년이나 앞둔 내년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문 청장은 “국정과제 발굴과 지속적 국정 기조를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지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는 데 모두가 주력해야 할 시점에 차기 시장 선거 분위기를 경쟁적으로 띄우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장 후보군인 이병훈 전 국회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면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당분간 자제해야 하며,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일부 출마 예상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

“시대변화·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검찰 내부 반발 없을 것”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을 주도할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1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장관 지명 소감과 검찰개혁 등 핵심 법무행정 추진 방향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들이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인 입장을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 주장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해선 “입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 아니겠나.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최대 현안으로 거론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 활동을 통해 가장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분히 관계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회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정안 여야 합의 처리

20% 지방 부담 삭제 100% 국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9000억원이 추정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하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였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선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행안부 추정안에는 산별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550만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회에서 여야는 전방위로 설전을 이어갔다.

대규모 추정 편성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주요 추정 지원 사업 항목의 형평성 논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랏빚이 줄었느냐. 물가가 안정됐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각을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채무조정 논란 등이 가열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